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일본은행과 정치권, 지진복구비 조달을 놓고 갈등

- 동일본지진의 사태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복구비 조달을 위해 조만간 발행될 국채를 일본은행이 직접 매입해 달라는 정치권의 압력이 커지고 있음.
 - 일본 정치권은 기반시설 복구 등 원전사태 수습을 위한 비용이 20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국채발행을 위해 특별예산 편성을 추진 중임.
 - 여야 정치권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일본 대장성이 국채를 대거 매입하여 대공황에서 벗어난 성공사례를 근거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게 될 국채를 일본은행이 직접 매입하도록 일본은행을 압박하고 있음.
- 그러나, 일본은행은 일본경제가 지진사태 이전부터 시작된 디플레이션과 수요저하,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줄고 국가부채가 1,000조 엔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채의 직접매입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
 -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일본은행총재는 엔화를 발행하여 국가채무를 화폐화 하는 것은 대규모 화폐발행으로 이어져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함.
 - 특히,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부채를 화폐화 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비쳐질 경우 국채금리가 올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을 우려함.
 - 일본은행은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에 따른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도 채권시장이 충분히 신규발행 국채를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임.
- 일본은행은 그동안 대지진 발생 이후 금융시장에 15조 엔을 투입하였으며, 향후 국채의 직접매입보다는 유통시장을 통해 간접매입 방식을 취하기를 희망하고 있음.
 - 한편, 일본은행은 지난 12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지진으로 취약해진 투자심리를 지지하기 위해 기존의 채권(국채포함)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5조 엔에서 10조 엔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.
 - 지난 12일 국회 예산심의회에서 일본은행 총재는 적절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겠지만 경제상황과 물가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.

(로이타 4/11, 4/12, 마이니치신문 4/12)